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 11.5 ~ 26.6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 필요 ▶

목 차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	2
3.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 개 요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브렉시트 (Brexit)**가 현실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이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주체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 시행이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 충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 편성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와 추경 규모, 추경 편성 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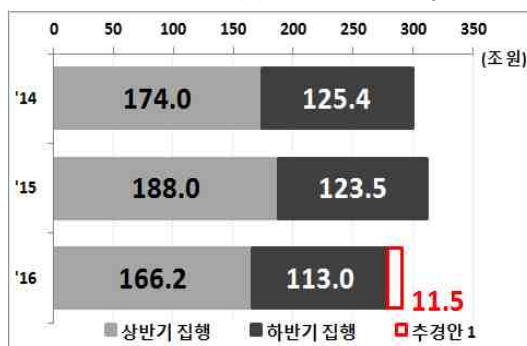
① (타이밍)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추경 편성이 지체되어선 안된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완화적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② (규모) **재정절벽을 방어하여 작년, 재작년 하반기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11.5조 원에서 최대 26.6조 원이다.** 2016년 1~5월 재정집행 진도가 2014년 및 2015년 동기간 진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연말에 재정절벽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는 연간 주요 관리대상사업(279.2조 원)에 필요한 재정집행 규모 중 상반기에만 59.5%인 166.2조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지출액은 113.0조 원이다. 이는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규모인 약 124.5조 원 대비 11.5조 원 부족한 규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집행 가능한 지출액 113.0조 원은 상반기 동등 비율(50% : 50%)로 집행 가정했을 경우 대비 26.6조 원(9.5%p) 부족하다.

(최소 규모) 소극적 경기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11.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전년동기대비 3%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기 위한 규모이다.

(최대 규모) 적극적 경기 진작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26.6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반기에 앞당겨 지출한 규모로 인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규모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2014~2016년 하반기 재정 집행 규모 및 추경 규모案 >



< 2016년 상하반기 재정 집행 계획 및 추경 규모案 >



③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30% 초반 수준에서 2015년에는 37.9%로 확대되었다.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약 40조 원 이상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편성 방향) 현재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GDP갭률은 201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2016~2020년에는 2% 중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정부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집행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소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용액과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용액은 2001~2005년간 연평균 4.6조 원에서 2011~2015년간 연평균 11.6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월액은 2001~2005년간 연평균 4.5조 원에서 2011~2015년간 연평균 6.8조 원으로 증가했다.

■ 시사점

첫째, 통화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이에 더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경기 변동이 안정화되고 경기가 더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정절벽을 방어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최근 2개년간의 하반기 경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는 11.5조 원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최대 규모는 26.6조 원이다. **셋째, 중기 재정건전성의 제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페이고(Pay-go) 원칙, 재정 준칙의 법제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여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추경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R&D 및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변경, 공정지연, 제도 변화 등에 따르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재정사업 선정 기준이 정치적인 고려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환으로 법제화하는 등 예산제도 개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1. 개요

○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

- 브렉시트(Brexit)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차단,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방지, 올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

- 최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존재
- 현재 국내 경기는 장기간 저성장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¹⁾
- 특히 하반기 국내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부양 조치 부재 시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 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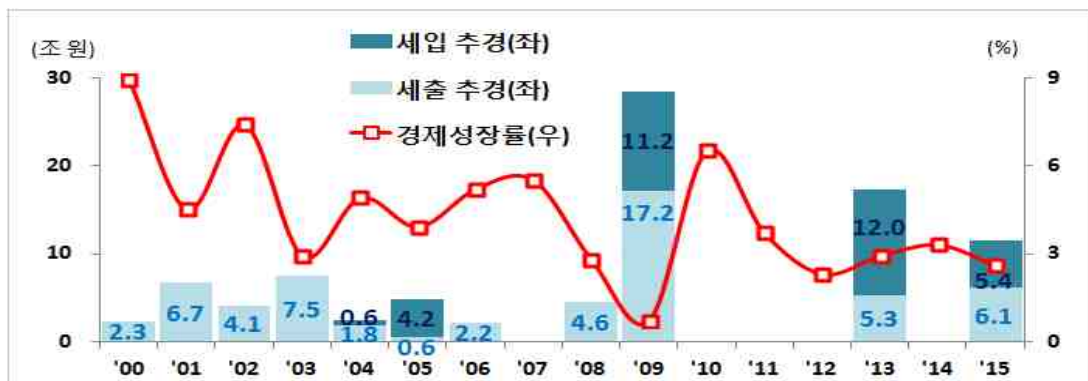
○ 과거 추경 편성 시 경기 부양 효과 달성

-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이후 이듬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됨

- 추경이 편성된 연도(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3년) 이듬해의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상승했음
- 2003년 카드 사태 및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추경 편성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²⁾

○ 이에 추경이 시급히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와 추경 규모, 추경 편성 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도별 추경 규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1)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5월,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2)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

- (타이밍)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지금이 추경 편성 시점
- 현재와 같이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당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이용하여 경기 조절 가능
 - 국가의 총수요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통화정책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누어 짐
-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
 -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 소비·투자 확대 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변동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만약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킴
 - 이에 반하여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둬 물가 불안을 억제함
- 완화적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공조(Policy mix)가 이루어 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
 -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높아져 민간 부문의 투자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을 기준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상쇄시켜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을 완화

-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시 정부가 지출을 직접적으로 늘린 것이 가계나 기업에 흘러들어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경제의 산출을 높이므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부문에 파급되지 않는 유동성함정 발생 시 유용

< 과거 추경 규모와 기준금리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과거 추경 편성 시 국내 국고채 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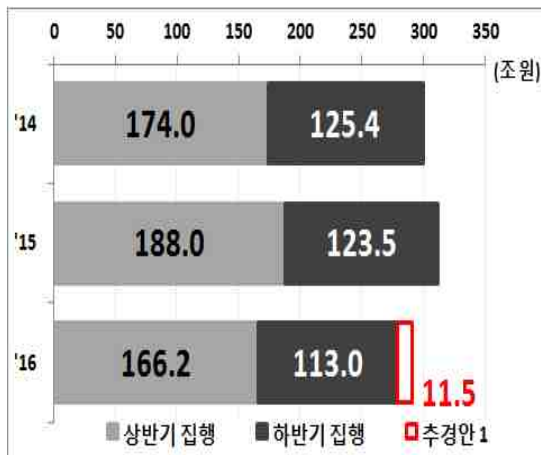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규모) 재정절벽을 방어하여 최근 2년간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추경 편성 규모는 약 11.5 ~ 26.6조 원
- 올해 1~5월간 재정집행 진도는 재정절벽이 발생했던 2014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연말 재정절벽 발생 우려
 - 2016년 1~5월간 재정집행 진도율은 48.4%로서 2014년 1~5월 진도율인 45.2%보다 높음
 - 2014년말에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두 부분의 기여도가 하락
 - 2015년에도 1~5월간 재정집행 진도율도 47.1%로 높았지만 추경 편성으로 재정절벽 방지
- 최소 추경 규모案 : 최소한 2014~2015년 하반기와 유사한 3%대 내외의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11.5조 원

- 관리대상사업³⁾ 기준, 2014년 연간 집행 계획(299.4조 원) 중 상반기 174.0조 원(58.1%)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125.4조 원 집행 추정
- 2015년 연간 집행 계획(313.3조 원) 중 상반기 188.0조 원(60.0%) 집행된 부분을 제외 후 하반기에는 123.5조 원 집행(추경 8.1조 원 포함)⁴⁾
-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은 각각 3.0% 및 2.9%
- 2016년 연간 집행 계획(279.2조 원) 중 상반기 계획 166.2조 원(59.5%) 집행 예정분을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113.0조 원 집행 가능
- 2016년 하반기 집행 가능한 규모인 113.0조 원은 2014~2015년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규모인 124.5조 원보다 11.5조 원 부족

- 최대 추경 규모案 :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26.6조 원
 - 정부는 2016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필요한 279.2조 원 중 상반기에 59.5%인 166.2조 원을 집행하기로 계획⁵⁾
 - 즉, 상하반기 동등 비율 집행 대비 상반기에 9.5%p를 미리 집행하는 상황이며,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규모는 26.6조 원
 - ※ 26.6조 원 = 279.2조 원 × 59.5% - 279.2조 원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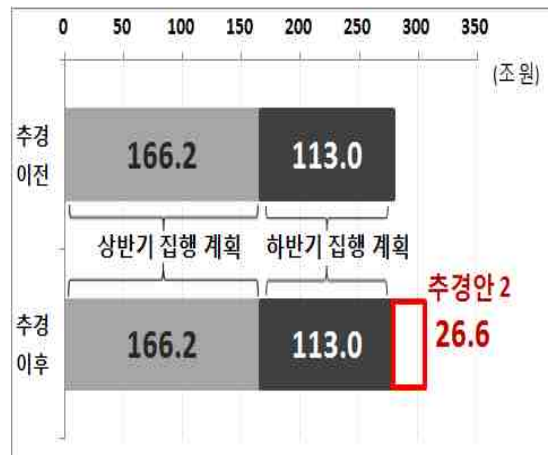
< 2014~2016년 하반기 재정 집행 규모 및 추경 규모案 >



자료 :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2016년 하반기 집행은 추정치.
- 2) 관리대상사업 기준.

< 2016년 상하반기 재정 집행 계획 및 추경 규모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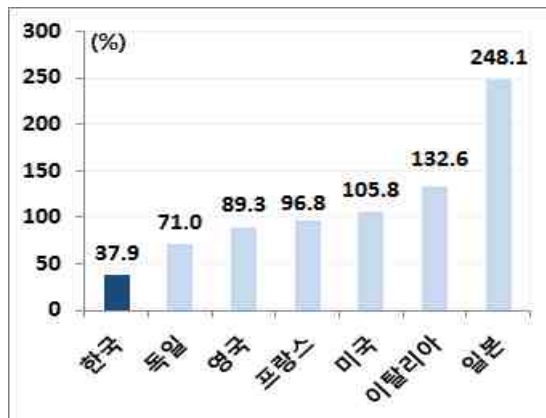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관리대상사업 기준.

3) 관리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집행 규모는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로서 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됨(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4) 2015년 연간 관리대상사업 계획 313.3조 원 중 7~12월간 115.4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경 사업 8.1조 원도 집행.
 5) 기획재정부, 2016년 5월,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재정건전성)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회원국 중 양호한 편에 속하지
만,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
-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
 - 2015년 한국의 국가채무/GDP 비율은 37.9% 수준
 - 독일 71.0%, 영국 89.3%, 프랑스 96.8%, 미국 105.8% 등 OECD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높고, 특히 일본은 248.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즉, 한국의 국가채무/GDP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의 재
정 상황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
 - 2010년 30% 초반 수준이던 국가채무/GDP 비율은 2013년 34.3%, 2014년
35.9%, 2015년 37.9%로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관리재정수지⁶⁾ 적자 규모는 2009년 이후 확대되고, 2015년에는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에 근접한 수준까지 증가
 -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
가세는 약화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국가채무/GDP 비율(2015년)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16.04).
주 : 한국 수치는 IMF 자료가 아닌
기획재정부 자료를 사용.

< 관리재정수지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6)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임.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
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하며, 이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부,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 (편성 방향) 현재 경기 침체 지속을 방어하고 경기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도 고려

- (GDP갭률)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GDP갭률이 201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 중

- 잠재GDP는 경제가 노동 및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생산수준을 뜻함
- GDP갭률은 실제GDP가 잠재GDP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마이너스일 경우 우리 경제가 가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GDP갭률은 201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5년 3분기에 잠재성장률 수준(GDP갭률이 0인 상태)으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2016년 1분기에 -0.3%를 기록함

- (잠재GDP 성장률) 향후 우리 경제는 노동인구의 감소, 자본투입의 한계 등으로 잠재GD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노동과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을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GDP의 추정과 전망이 가능함⁷⁾
-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으로 결정되는데, 향후 우리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연간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전체 노동투입은 감소가 예상됨
- 자본축적은 총고정자본형성과 감가상각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감가상각률이 과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우리 경제의 자본축적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3%에 육박하였으나, 2011~2015년 3.2%로, 2016~2020년에는 2.7% 수준으로 하락이 전망됨
- 이는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분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7) 자세한 추정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2016.1),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참조.

< GDP갭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실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6년 실제성장률과 2016 ~ 2020년 잠재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를 기반으로 함.

○ (재정 집행의 효율성) 국가재정관리 능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 한국의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경쟁력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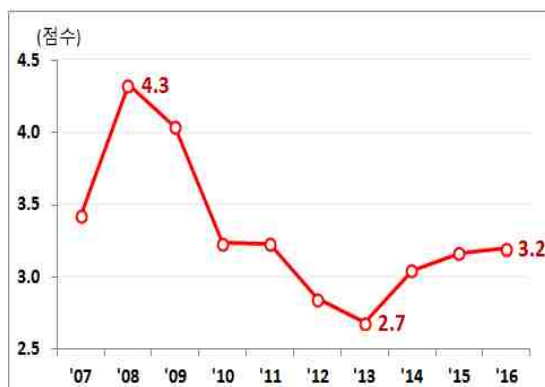
- 한국의 국가재정운영 효율성⁸⁾ 점수는 2005년 6.1점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 3.6점을 기록하며 61개국 가운데 38위로 하위권 수준
- 정부지출의 낭비정도⁹⁾ 점수는 2008년 4.3점에서 2016년 3.2점으로 하락, 140개국 가운데 70위로 중위권

< 한국의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지수 >



자료 : IMD.

< 한국의 정부지출 낭비 지수 >



자료 : WEF.

8) Public Finance, 0-10 (최고점) :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 여부,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임.

9)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1-7 (최고점) 정부는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3. 시사점

첫째, 통화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 경제 상황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동시에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
 - 기본적으로 현 불황이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함
 -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됨

둘째, 재정절벽을 방어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재정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수준보다 더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
 -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 정도가 심각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 회복력을 강화
 - 또한,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셋째, 중기 재정건전성의 제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페이고(Pay-go) 원칙¹⁰⁾, 재정 준칙¹¹⁾의 법제화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

10) 의무 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한 원칙.

1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

-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
 -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OECD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넷째, 현재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근로여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과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통해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
 - 근로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래시장상품권, 월세쿠폰 등의 공적이전을 확대
- 또한 정부지출 확대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추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김혜선·황종률(2013)¹²⁾에 따르면 교육보건형 지출이 가장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공공행정형 지출이 가장 낮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음
 - 단, 이때 고용창출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노동인구 및 자본축적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일 수 있는 R&D 및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12) 김혜선·황종률, 2013년 10월,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제17호.

다섯째,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 사업변경, 공정지연, 제도 변화 등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 사업으로 예산 변경을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 극대화
- 재정사업 선정 기준이 정치적인 고려와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경제적인 합리성에 철저히 기초되어야 함
 - 특히, 중복 및 유사사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부서 간 협업의 활성화가 필요
-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환으로 법제화하는 등 예산제도 개혁의 내실화가 필요 **HRI**

【연구 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2072-6214, jphong@hri.co.kr)
/ 연구위원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정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in@hri.co.kr)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오준범 연구위원 (2072-6247, jboh19@hri.co.kr)